

# 2008년 금융위기로 바라본 금융의 윤리적 책임

## 『윤리적 추론』, 『경제사』 강의 페어링

금융공학과 4학년 201022081 홍동수, 이진희 교수님 지도

### 페어링의 목적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주택 담보부 대출의 부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를 고통 속을 헤매도록 만들었다. 위기의 상황에서 탐욕스러운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들의 공적자금을 투여 받아 기사회생을 하였다. 하지만 위기의 주범인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때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여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그들은 ‘공적자금의 투여는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따라서 본 페어링의 목적은 2008년 금융회사에게 공적자금을 투여한 미국 연방준비은행법 제13조 3항과 금융회사의 탐욕스러운 행동의 윤리적 비판을 통해 금융이 갖춰야할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 『윤리적 추론』의 핵심

####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잘 알려진 공리주의는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이 주장한 옳음에 대한 정의이다. 필자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은 다수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융회사와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옳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 페어링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옳지 않았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 『경제사』의 핵심

#### ‘연방준비은행법 제13조 3항’

연방준비은행법 제13조 3항은 연방준비은행이 민간 부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이다.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시장에 유동성이 완전히 증발하여 신용시장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이사회 총재 5명의 동의를 받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적자금을 받고서도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낸 악법이라고 회자된다.

### 금융의 윤리적 책임과 비판

금융회사 및 연방의 입장 –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공적자금 지원은) 필요한 조치였다.”

금융회사 및 연방의 입장에 대한 변호 – “금융위기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미국의 실물경제에 위기가 전염되어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의 반박 – “필요한 조치인 것은 동의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았다.”

필자의 반박에 대한 변호 – “정부의 정책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방향은 옳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의 책임을 금융회사와 그 임원들이 아닌, 공적자금을 지원해준 납세자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았다. 만약 금융회사와 그 임원들이 금융위기의 책임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공적자금 지원이 정당하게 납득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 및 연방의 재반박 – “그렇다면 금융위기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금융위기를 방치한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우리의 정책은 결론적으로 옳았던 것이다.”

필자의 재반박 –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은 미국만의 착각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위해 무제한으로 달러를 발행하는 양적완화(Quantative Easing)를 시행하였다. 이는 막대한 달러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이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여부에 따라 전 세계가 요동치게 만들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았을 때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불모로 잡은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옳지 못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며 추가적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한다.”

### 다른 사례에서의 적용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흔히 좀비기업이라 불리며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들이 위의 사례와 비슷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양, 조선, 건설 산업의 경우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생각은 없이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며 무분별하게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이며 이러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 결론

금융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이다. 금융이 없다면 우리는 차 한 대, 집한 채를 마련하기위해 평생을 다 바쳐도 어려울 것이다.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선순환을 유발하는 금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금융이기에 우리는 더 엄격해져야한다.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해야한다. 우리가 금융의 단맛에 취해 금융을 가벼이 여겼던 결과는 역사에서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2008년 탐욕스러운 금융회사의 만행은 정당화 시킬 수 없지만, 소수의 탐욕스러운 금융회사를 처벌하기위해 모든 금융시스템을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규제를 더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2008년과 같은 위기와 도덕적 해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